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정책 분석

▣ 박 정 현*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국가에서 발표된 경기부양책에는 여러 형태의 ICT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ICT 인프라 투자와 ICT 활용 사업으로 나뉘어지며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맞게 목표 및 범위가 설정되어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신성장동력 비전과 녹색뉴딜 사업에서 ICT 기술을 기반 기술로 삼아 다양한 인프라 투자 및 융·복합 사업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및 기술을 갖춘 한국의 경기부양책 중 ICT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주요국 경기부양책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고 미국과 일본의 정책 형성 과정을 통해 좀 더 입체적인 교훈을 얻고자 한다.

목 차

- I. 서 론 / 1
- II. 각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 관련 내용 / 3
 - 1. 경기부양책의 세계적 추세 / 3
 - 2.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내용 / 12
 - 3. 시사점 / 29
- III. 결 론 / 31

I. 서 론

2007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미국 서

브프라임 사태는 주요 금융기관 및 은행의 도산 사태와 함께 금융 위기로 이어졌으며,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 금융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2008년 초부터 금융 기관의 긴급구제 혹은 국유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금융 부문에서 불거진 세계적 경제 위기는 연이은 제조업 도산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생산 위축, 소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213, nique08@kisdi.re.kr

감소 및 세계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되는 실정이다.

단순한 금융 대책만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세계 여러 나라는 재량적 재정 정책으로서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연이어 발표하여 적극적인 수요 견인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3월 추경 편성안으로 보완하여 총 32.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또한 ICT를 기반 기술로 하여 건설·운송 등에 활용하는 대규모 SOC투자 사업인 녹색뉴딜사업 등을 발표하여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이 24.7조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약 5조원 증가)하였다.¹⁾

그러나 전세계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및 일부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발표하는 등 경제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듯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위시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4% 성장 회복에 합의하여 앞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이 전세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기부양책 확대 및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²⁾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 및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국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구성 등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고, 각국 경기부양책에 여러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ICT 관련 내용의 성격을 살펴본다. 특히 ICT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 ICT를 기반 기술로 하여 다양한 활용에 집중한 일본의 정책 형성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1) 빈재익 외(2009), pp.22~24

2) 정무섭 외(2009), pp.1~7

II. 각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 관련 내용

1. 경기부양책의 세계적 추세

회원국을 위주로 작성된 OECD 경기부양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구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1) 경기부양책 규모

조사 대상국의 경기부양책 중 대부분은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 사용되며, 그 규모는 2008년 GDP 기준 0.1%에서 5%에 달할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2008년 GDP의 3.5%에 해당하고, 2008~10년간 누적 예산 효과는 2008년 GDP의 2.5%에 이르는 액수이다.

절대금액 면에서 8,040억불로 최대를 기록한 미국은 2008년 GDP 대비 5.6%로 비율에 있어서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호주, 캐나다가 4% 이상을 기록하였다. OECD 비회원국 역시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중국이 5,850억불(2008년 GDP의 19%), 브라질이 1,520억불(2008년 GDP의 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와 같은 절대 규모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 경색에서 시작한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는 각국 통화정책 운영 능력의 차이 등 재정적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IMF에서는 재

3) 대상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 등 OECD 회원국 30개국. 2009년 3월까지 OECD 사무국에 제출한 각국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동안정화장치로 인한 재정 효과 및 경제 위기 대응책이 아닌 재정 대책은 제외하였으며, 경제 위기에 대한 직접적 대책으로 도입된 경기부양책이 '08~'10년 재정 균형(fiscal balance)에 미치는 누적 영향으로 측정. OECD(2009a), p.110

4) OECD(2009b), p.18

정적 경기부양책 규모의 차이에 관해 크게 경기부양책 필요성의 차이와 재정 여력 (fiscal space)의 차이를 지적한다.⁵⁾ 우선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규모, 산출물 차이(output gap)의 규모 등이 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큰 국가는 재량적 재정 정책의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경기부양책 규모가 큰 미국·캐나다·중국의 경우 IMF 분석에서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부양책 사이에 역 상관관계가 주장되었다.⁶⁾ 재정 확장의 전반적인 강도는 산출물 차이에도 의존하는데,

〈표 1〉 주요국 경기부양책 규모

국 가	재정패키지 절대금액 (2008~'10년, 백만불)	2008년 GDP 대비(%)
미 국	804,070	5.6
독 일	107,789	3.0
일 본	99,992	2.0
캐 나 다	61,551	4.1
스 페 인	56,754	3.5
호 주	45,673	4.6
한 국	42,667	4.9
영 국	38,003	1.4
프 랑 스	18,568	0.6
중 국	585,000	19
브 라 질	152,000	15
러 시 아	101,000	8
칠 레	4,000	2.8

자료: OECD(2009a), p.111, OECD(2009b), pp.18~19.

5) IMF(2009a), 조사 대상: G-7 국가 및 중국, 인도

6) OECD 연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주장되었다. OECD(2009b), p.21

성장률 저하 등으로 산출물 차이가 커진 미국·일본·캐나다에서는 더욱 큰 규모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산출물 감소와 경기부양책 규모의 상관관계가 주장되었다. 또한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업 보험 및 훈련 등 사회적 안정망이 부족한 점 역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재정 여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재정 적자, 공채(public debt), 이자율 등이 있다. 상기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경제 위기를 맞은 미국·캐나다·중국·독일은 좀 더 큰 재정 확장 여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실질 이자율과 공채를 기록한 이탈리아는 재정 확장 여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채와 경기부양책 사이에는 역 상관관계가 주장되었다.⁷⁾

(2) 경기부양책 구성 및 내용

재정적 경기부양책은 감세와 정부지출로 구성된다. 감세의 경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감당할 여지가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감세 정책이 개인 소득세 및 간접세(VAT, 소비세 등)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지출의 경우, 단기적 고용 효과 및 장기적 성장률 상승을 유도하는 공공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및 중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자본 이전도 중시되었다. 호주, 폴란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덴마크,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투자에 나서 2008년 GDP 대비 약 1%를 할애하였다. 자본 이전은 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코, 일본, 한국, 포르투갈, 멕시코, 슬로바키아에서는 기업 대상 대규모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었다.⁸⁾

7) IMF(2009a), pp.2~4

8) OECD(2009b),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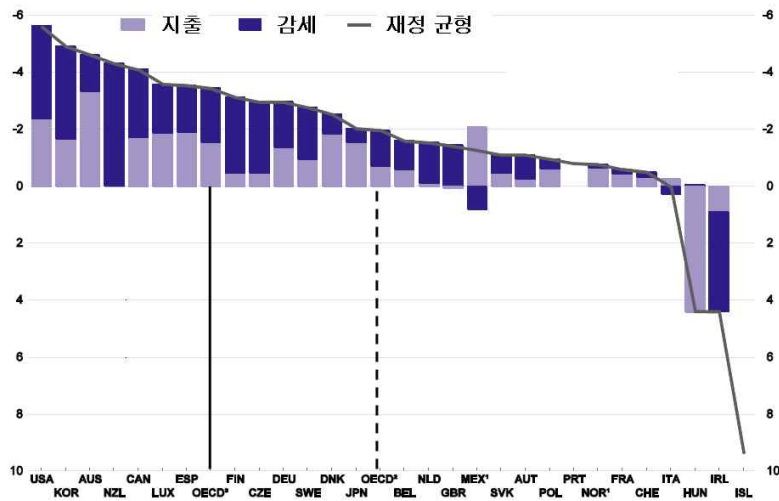
〈표 2〉 경기부양책 구성(2008~2010년간, 2008년 GDP 비율)

	순효과	조세 대책					지출 대책					
		총계	개인	사업	소비	사회 기여	총계	예산 소비	투자	가계 이전	사업 이전	자치단체 이전
호주	-4.6	-1.3	-1.1	-0.2	0.0	0.0	3.3	0.0	2.6	0.8	0.0	0.0
오스트리아	-1.1	-0.8	-0.8	-0.1	0.0	0.0	0.3	0.0	0.1	0.1	0.0	0.1
벨기에	-1.6	-1.0	-0.3	-0.6	-0.1	0.0	0.6	0.0	0.1	0.5	0.0	0.0
캐나다	-4.1	-2.4	-0.8	-0.3	-1.1	-0.1	1.7	0.1	1.3	0.3	0.1	-
체코	-3.0	-2.5	0.0	-0.4	-0.1	-0.2	0.5	-0.1	0.2	0.0	0.4	0.0
덴마크	-2.5	-0.7	0.0	0.0	0.0	0.0	1.9	0.9	0.8	0.1	0.0	0.0
핀란드	-3.1	-2.7	-1.9	0.0	-0.3	-0.4	0.5	0.0	0.3	0.1	0.0	0.0
프랑스	-0.6	-0.2	-0.1	-0.1	0.0	0.0	0.4	0.0	0.2	0.1	0.0	0.0
독일	-3.0	-1.6	-0.6	-0.3	0.0	-0.7	1.4	0.0	0.8	0.2	0.3	0.0
그리스	0.0	0.1	0.4	0.1	0.0
헝가리	4.4	0.0	-0.1	-1.5	1.6	0.0	-4.4	..	0.0	0.0
아이슬란드	9.4	..	1.0	-1.8	-1.7	-1.7
아일랜드	4.4	3.5	2.0	-0.2	0.5	1.2	-0.9	-0.7	-0.2	-0.1	0.0	0.0
이탈리아	0.0	0.3	0.0	0.0	0.1	0.0	0.3	0.3	0.0	0.2	0.1	0.0
일본	-2.0	-0.5	-0.1	-0.1	-0.1	-0.2	1.5	-0.2	0.3	0.5	0.4	0.3
한국	-4.9	-3.2	-1.4	-1.2	-0.2	0.0	1.7	0.0	0.9	0.1	0.5	0.2
룩셈부르크	-3.6	-1.7	-1.2	-0.5	0.0	0.0	1.9	0.0	0.7	1.0	0.2	0.0
멕시코	-1.3	0.8	0.0	0.0	-0.4	0.0	2.0	0.0	1.1	0.3	0.4	0.0
네덜란드	-1.5	-1.4	-0.2	-0.4	0.0	-0.8	0.1	0.0	0.0	0.1	0.0	0.0
뉴질랜드	-4.3	-4.3	-4.3	0.0	0.0	0.0	0.0	0.1	0.6	-0.6	0.0	0.0
노르웨이	-0.8	-0.1	0.0	-0.1	0.0	0.0	0.7	0.0	0.3	0.0	0.0	0.3
폴란드	-1.0	-0.4	0.0	-0.1	-0.2	0.0	0.6	0.0	1.3	0.1	0.0	0.0
포르투갈	-0.8	0.0	0.4	0.0	0.4	0.0
슬로바키아	-1.1	-0.6	-0.6	-0.1	0.0	0.0	0.5	0.0	0.0	0.0	0.5	0.0
스페인	-3.5	-1.6	-1.6	0.0	0.0	0.0	1.9	0.3	0.7	0.2	0.7	0.0
스웨덴	-2.8	-1.8	-1.5	-0.2	0.0	-0.2	0.9	0.7	0.3	0.1	0.0	0.0
스위스	-0.5	-0.2	-0.2	0.0	0.0	0.0	0.3	0.3	0.0	0.0	0.0	0.0
터키
영국	-1.4	-1.5	-0.6	-0.1	-0.7	0.0	0.0	0.0	0.1	0.1	0.0	0.0
미국	-5.6	-3.2	-2.4	-0.8	0.0	0.0	2.4	0.7	0.3	0.5	0.0	0.9

자료: OECD(2009b), p.111.⁹⁾

감세와 정부지출의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1]에서처럼 전체 대상국의 경우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중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G7 국가들은 감세와 재정지출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MF 보고서에서는 G20 국가의 경우 감세와 정부지출의 비율이 3:7로 나타나 선진국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서는 첫째, 감세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이라기보다 감세 정책 실행이 상대적으로 좀 더 쉽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¹⁰⁾ 둘째, 재정지출의 효과가 감세보다 높다. 국민소득을 재정투입으로 나눈 재정승수 값이 인프라투자 등 지출의 경우 0.5~1.8인데 반해 감세의 경우 0.3~0.6으로 분석되었다.¹¹⁾ 셋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재정지출의 의미가 더욱 크다.¹²⁾

[그림 1] 경기부양책 규모 및 구성(2008~2010년간 누적 영향, 2008년 GDP 비율)



자료: OECD(2009a), p.109.¹³⁾

9) 그리스, 멕시코, 노르웨이 2010년 자료 부족
 10) OECD(2009c), p.8
 11) IMF(2009b), p.19
 12) IMF(2009b), p.25
 13) 멕시코와 노르웨이는 2010년 자료 부족; 파선: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부양책의 성격 상 현금을 풀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 총수요를 끌어올려 단기 수요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역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에서 “뉴딜”이란 이름을 붙여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듯이 <표 3>에서처럼 인프라 투자, R&D·기술 개발 지원, 인적 자원 확충, 저탄소·에너지 효율적 기술 개발이 장기적 성장을 위한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ICT 관련 내용 역시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표 3> 경기부양책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기업 지원	- 부가세를 인하 등 감세, 단기신용보증, 비임금 노동비용 삭감, 고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한 부양책
특정 산업분야 지원	- 자동차, 건설업 등
가구소비 지원 및 위기 노출 감소	- 감세, 가구에 대한 현금 지불, 실직수당,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층 지원
장기적 성장을 위한 대책	- 인프라 개선 - R&D 및 혁신적 기술 지원 - 인적자원,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 에너지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 - 종종 비재정적 조치 등 규제책의 형태를 갖기도 함

자료: OECD(2009a), pp.21~24.

중장기 성장을 강조하는 시각은 일본 경기부양책의 변화 양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8월 이래 네 차례 총 132.2조엔(재정지출액 2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¹⁴⁾ 네 차례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고용·사회보장

터키 제외한 OECD 회원국 단순 평균; 실선: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제외한 OECD 회원국 가중 평균

14) 1차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2008년 8월, 11.5조엔), 2차 생활대책(2008년 10월, 26.9조엔), 3차 생활방어긴급대책(2008년 12월, 37조엔), 4차 경제위기대책(2009년 4월, 56.8조엔). 내각부

· 중소기업지원· 지역활성화 및 성장력강화· 저탄소사회 실현과 같이 취약계층의 위기 노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장력강화·저탄소사회 실현 대책이 ICT 활용에 해당한다. 이 중 원활한 기업 자금 지원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표 4>처럼 전체 경기부양책의 80.2%가 금융지원에 쓰이고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생활대책’과 ‘생활방어 긴급대책’의 금융대책 규모가 높아진 것처럼 아소 정부는 해외 및 국내수요 정체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약자·중소기업·지방 경제의 위기에 대한 노출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긴급한 단기적 금융 대책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당시 성장력강화·저탄소사회 실현 관련 내용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표 4> 일본 경기부양책 중 일부 규모 비교

명칭	안심실현	생활대책	생활방어 긴급대책	경제 위기대책	총계
금융 대책/전체 규모(조엔)	9.2/11.5	21.8/26.9	33.2/37	41.8/56.8	106/132.2
비율	77%	81%	89.7%	73.6%	80.2%
성장력 강화 및 저탄소/전체 규모(조엔)	1.9/11.5	0.5/26.9	1.1 ¹⁵⁾ /37	8.8/56.8	12.3/132.2
비율	16.5%	1.9%	3.0%	15.5%	9.3%

자료: 한국은행(2008a), 한국은행(2008b), 이형근(2009).

대규모 단기적 금융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2009년 초반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가 약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 위기를 경기침체 가속화라는 단기적 위기와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장기적 위기의 두 가지 위기로 인식한

경제전망·경제대책 사이트 <http://www5.cao.go.jp/keizai1/mitoshi-taisaku.html>

15) 주택론 감소수준 인상,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 부활 등이 에너지절약형 주택 개보수 감세, 친환경 자동차 취득 보유세 감면,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설비 투자 감세와 함께 세제 개정에 포함

다.¹⁶⁾ 그리고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는 저탄소·건강장수라는 글로벌 과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상정한다. 뒤이어 발표된 ‘경제위기대책’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금융대책 비율이 73.6%로 떨어지고 성장률·저탄소대책 비율은 15.5%로 증가하였다.¹⁷⁾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등 위기 이후 중장기적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녹색기술 개발을 위주로 인프라 투자, R&D, 기업 보조금 지급, 감세 조치, 인적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3) 한국의 경기부양책

한국은 426억불(2008년 GDP 대비 4.9%)로 주요 30개국 중 7위를 기록하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녹색뉴딜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¹⁸⁾ 기존의 ‘신성장동력사업’과 ‘한국형뉴딜사업’ 중 공공부문의 고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녹색뉴딜사업은 녹색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의 3대 주력분야의 27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¹⁹⁾ 본 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을 지향하는 여러 영역의 녹색사업들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 전체 일자리 창출의 97.6%가 녹색인프라, 즉 녹색 건설 및 토목사업에 관련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 역시 맡고 있다.²⁰⁾

16) 1995년 이후 발표된 일본의 경기대책이 약 11조~23조엔 규모였음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2009)

17) 환경 에너지 분야 보조금 지급은 기존의 감세 정책에서 나아가 09년 4월 대책에서 포함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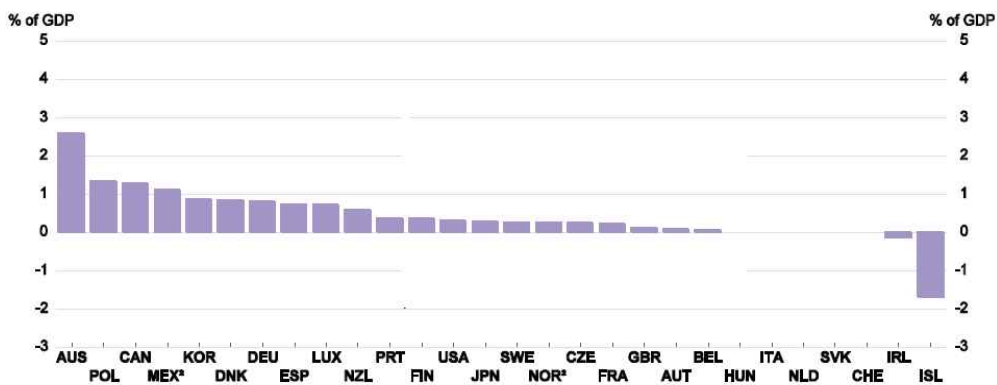
18) 본고 자료의 주요 출처가 된 OECD 보고서의 경기부양책 자료는 DSTI(과학기술산업 사무국)에서 지난 2~3월 초고를 작성한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to Restore Long-term Growth: Results of the OECD Questionnaire(DSTI/IND/STP/ICCP(2009)1/ADD/ FINAL)”에서 먼저 소개된 바 있으며 해당 문서에서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신성장동력 비전”과 “녹색뉴딜사업”을 위주로 소개되고 있다.

19) 기획재정부 외(2009)

20) 이외 한국의 경기부양책으로는 상기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과 이를 보완하는 추경 편성안이 있으며 공공지출 29.1조원, 세금감면 3조원, 세입보완 11.2조원 등 총 43.3조원이 배정되었다. 이 중 SOC 관련 사업은 8.6조원이다. 빈재익 외(2009), pp.28~29

상기한 경기부양책의 세계적 추세에 비교하여 한국의 경기부양책을 보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자동안정화장치가 약한 점,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점, 국가채무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납득할 만하다.²¹⁾ 감세와 재정지출 비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림 1]에서 감세정책 비율이 재정지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나, [그림 2]에서처럼 공공투자 비율이 조사 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단기 수요 진작 외에 장기적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다고 할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인프라 정비·재생에너지 개발·바이오매스 활용·그린ICT 및 클린 기술 개발 등 기존 사업을 친환경 관점에서 통합하여 전세계적인 그린 뉴딜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ICT를 사회적 기반 기술로 삼아 건물 에너지 관리, 지하시설물 전산화, 그린 홈 건설 등 융합 기술 개발을 구상하여 최근 OECD 사무총장이 거의 유일하게 완벽한 그린 ICT를 구현한 사업으로 평가한 바 있다.²²⁾ 또한 경제위기 대응 초반부터 저탄

[그림 2] 경기부양책 중 투자



자료: OECD(2009a), p.113.

21) 2008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317조 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 수준이며, 일본(170.3%) 미국(62.8%), OECD 평균 75.4%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OECD(2009b), p.21, 문향란(2009)

22) 박정현(2009), p.82

소 경제를 목표로 제시하여 선제 대응에 나서 정책 번복으로 인한 혼선을 야기하지 않은 점 역시 주목된다.

하지만 이는 수치와 시행 목표 등 표면만 놓고 본 것이므로 시사하는 바에 한계가 있어 다음 절에서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ICT 영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시사점을 얻도록 하겠다.

2.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내용

2009년 4월 기준 OECD 보고서에 따른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CT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크게 ICT 인프라 투자 및 ICT 활용 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에는 친환경 에너지효율을 위한 녹색기술 사업, R&D 및 인적자원 훈련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ICT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은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전파로 인하여 ICT가 일종의 정보 인프라로 인식되어 의료ICT 등 일부 첨단 과학기술 사업의 경우 기존 체계의 전산화 및 ICT 인프라 확장, ICT 융합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표 5〉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내용 분류

직접	ICT 인프라 확장 및 개선
간접	녹색기술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R&D
	교육 및 훈련 사업

자료: OECD(2009b), p.24 참고.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표 6〉에서처럼 많은 국가들이 ICT 영역에 대한 여러 형태의 사업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ICT 인프라 투자, 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기술을 위한 ICT 활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직접 투자의 경우 ICT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

역시 포함될 것이나 찾아보기 힘들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 경기부양책의 특성 상 사회적 문제 해결책을 위한 경제 회복의 도구로서 ICT 영역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³⁾ 또한 ICT 기술 개발은 주로 각국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인 것 역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경기부양책은 내각부에서 계획하고 발표하지만,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ICT 전략은 ICT 영역 주무부처인 총무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내용

국가	주요 내용
벨기에	그린 기술, 에너지 비용 감축 대책
캐나다	소외된(unserved) 격오지(rural and remote)까지 브로드밴드 확장 2010년까지 전캐나다인의 50%에게 전자 의료 기록 활용
중국	친환경, 혁신적 기술 개발
에스토니아	주택 에너지 절약 대책, 아파트 빌딩 에너지 효율성 20% 이상 개선을 위한 대출, 인식 제고, 에너지 감사 지원
EU	고속 인터넷 인프라(특히 외곽지역에 초점을 맞춘 고속 인터넷 확장 혹은 업그레이드), R&D,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린 상품 장려, 클린 기술 개발
핀란드	브로드밴드 확장, 에너지 개발
프랑스	TGV Est선에서 인터넷, 중소규모 도시 브로드밴드망 투자, 교육체계 혹은 연구커뮤니티의 망 개발, 프랑스 철도회사 ICT 체계 현대화,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기술 및 클린 기술, 전자정부, 게임 기술 투자
독일	브로드밴드 투자(브로드밴드 망 속도 증가, 모든 소외 지역 2010년까지 연결, 2010년말까지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접속), R&D, 녹색 기술
이탈리아	브로드밴드 투자, 자동차 산업 그린화,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
일본	지능형운송체계, 의료 부문 ICT 인프라 개선, ICT 인력 훈련, 전자 정부, 환경관련 ICT 개발, 친환경 및 선진 기술 연구 기금 조성, 친환경 차량 세금 감소, 디지털 방송 전환 규제책 마련
한국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디지털 방송 전환 규제책 마련

23) OECD(2009b), pp.22~24, 27~28

국가	주요 내용
룩셈부르크	Luxconnect 정보고속도로 가속, 공공 통신 사업 지원
노르웨이	ICT 인프라 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자정부, 전자 서명, 녹색 기술, 법정 화상회의 시설 설치, 전자처방전 도입
폴란드	통신 인프라 투자, 재생가능한 에너지
포르투갈	브로드밴드 투자(NGN 브로드밴드 보조금 지급 투자), 에너지 전송 인프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효율성 제고
슬로바키아	고속 브로드밴드, 원자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슬로베니아	공공기관 연구망, 전자 의료 정보 체계
스페인	통신 부문 현대화(NGN 광섬유 설치 감독, 브로드밴드 규제), 교육 및 연구기관에 ICT 인프라 제공
스위스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터키	케이블,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세제 혜택
영국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의 브로드밴드 투자
미국	브로드밴드 투자(격외지 브로드밴드 연결 지원, 학교 도서관 건강관리 제공자 등 브로드밴드 장려), 스마트 전력 그리드, 보건분야 전산화, 전자 의료 기록, 대체가능한 에너지, 디지털 방송 전환 규제책

자료: OECD(2009a), pp.22~27.²⁴⁾

(1) ICT 인프라 투자

ICT 인프라 투자는 우선 기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까지 브로드밴드 망을 확장하거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위해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국 ICT 인프라 투자 사업은 그 목표와 대상에 있어 다양한데, 호주와 독일처럼 모든 가구에 대한 인터넷 연결, 일본과 미국의 의료 부문 ICT 인프라 개선, 프랑스의 운송 부문 인프라 투자와 같은 망 확장 사례와 함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NGN 도입 강화와 같은 첨단 ICT 인프라 투자와 같은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24)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OECD 30개 회원국, 5개 가입대상국(에스토니아,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1개 관계증진국(남아공)이다.

이외에도 ICT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사업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공공인프라 현대화 사업, 일본의 공공시설 방진(quakeproof) 사업, EU의 범유럽 에너지 연계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교통 혼잡 감소 등 자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7〉 주요국 브로드밴드 투자액 및 목표

국가	투자액 (억 달러)	목 표	목표 보급률	목표 속도
호주	334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 망 연결	90%	100MB/s
일본	290	지능형운송체계, 의료 부문 ICT 인프라 개선, ICT 인력 훈련, 전자 정부, 환경관련 ICT 개발	-	-
독일	2.19	브로드밴드 망 속도 증가, 모든 소외 지역 2010년까지 연결, 2010년말까지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접속	전가구 75% (2014년) 모든 가구 (2018년)	50MB/s
캐나다	2.11	소외된 격오지 커뮤니티까지 보드밴드 망 확장	-	-
핀란드	0.96	고속 브로드밴드 확장	모든 가정 (2016년)	1MB/s (2010년) 100MB/s (2016년)
포르투갈	0.73	NGN 브로드밴드 보조금 지급 투자	150만 사용자 연결가능한 광섬유망	-
프랑스	0.50	TGV Est선에서 인터넷, 중소규모 도시 브로드밴드망 투자, 교육체계 혹은 연구커뮤니티의 망 개발	-	-
스페인	-	NGN 광섬유 설치 감독, 브로드밴드 규제	-	전국 30MB/s
영국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의 브로드밴드	수요가 있는 모든 가정	2MB/s (2012년)

자료: OECD(2009b), p.24.

1) 성격-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공 인프라

이와 같이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브로드밴드 망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ICT 인프라 투자가 포함된 이유에 관하여, OECD의 한 경제학자는 정책결정자들이 ICT인프라를 도로·철도·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⁵⁾ 그러므로 브로드밴드의 적절한 속도, 브로드밴드 소외 계층(unserved or underserved)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목표 보급률(penetration)과 목표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민간 사업체와 가정에서의 인터넷 연결 보장 및 격오지까지의 인터넷 연결 보장 등 보편적 서비스 개념 아래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기부양책 중 ICT 인프라 투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브로드밴드 사업의 경우, FCC(연방통신위원회)로 하여금 1년 안에 모든 미국인이 브로드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관한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2일 FCC는 필요성 평가 후 장애요인 해결 방안을 모색 및 부처 간 조율을 통해 1년 안에 위원장 이름으로 농촌 브로드밴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발표하였다.²⁶⁾ 목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같이 미국 내 어느 지역의 있는 국민도 불편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인프라 투자의 조건

대부분의 ICT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요 진작을 위한 조건인 “빠른 시기 내에 착수 가능(shovel-ready)”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부양책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 이 중 특히 유선 투자의 경우, 노동집약적 사업이어서 임금 고용자들의 지출을 늘여 특정 지역의 지출을 늘이는 등 강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⁷⁾ 또한 인터넷 소외지역으로의 망 확장이 기존의 인프라인 전기·가스·수도·운송망 개량 사업보다 한계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 인터넷을 설

25) Saez(2009)

26) FCC(2009)

27) OECD(2009d), p.12

치하면 기존 인프라를 스마트 인프라로 개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 경제 여러 영역의 효율성 제고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반적인 인프라 투자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생산적 정부 지출의 효과가 있어 재정 지출의 주요 사항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몇몇 영역의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입증되었다. 운송의 경우 도로가 신설된 이후 신설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도로로부터의 거리로부터 반비례하는 spillover 효과가 확인되었다. 전기의 경우, 전기 망의 전기 소비량 증가와 GDP 증가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또한 통신의 경우,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가구당 10 broadband 가입자가 1인당 GDP 성장의 1.2% 증가에 상응한다고 하였다.²⁸⁾ 또한 OECD 보고서는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의 승수 효과 분석을 통해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표 8>을 보면 인프라 투자가 2년차에 들어서면 1.0을 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소비세 및 간접세의 효과는 2년차에 들어서도 0.5에 머무르고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승수 효과 분석

	미국		독일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지출 정책				
인프라 투자	0.9	1.1~1.3	0.8	1.0, 1.2
정부 구매	0.7	0.8~1.1	0.4	0.5~0.8
가계 이전	0.5	0.8~0.9	0.3	0.5~0.7
감세 정책				
개인소비세	0.3~0.5	0.5~0.9	0.2~0.3	0.3~0.7
간접세 및 기타	0.2~0.3	0.3~0.5	0.1~0.2	0.2~0.4

자료: OECD(2009a), p.116 참조.

28) OECD(2009d), pp.10~11

하지만 경기부양책에 있어 ICT 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데, 우선 단기 수요 효과를 얻기 위해 신속히 착수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출의 소요 대상이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를 고려하여 유휴 인적 자원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설치 이후를 염두에 두고 향후 효과도 따져보아야 한다.²⁹⁾ 즉, ICT 인프라 투자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각국의 ICT 인프라 투자 정책은 각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므로 ICT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책에 포함 여부는 각국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례: 미국 경기부양책의 브로드밴드 투자 배경

오바마 행정부 경기부양책(The Recovery Act)에 72억불 규모의 ICT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고 초고속망 보급에서 소외된 격오지를 중심으로 망 설비를 제공하여 학교·도서관·병원·공공시설 등에 초고속인터넷 관련 설비를 구축 및 활용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17일까지 FCC는 모든 미국인이 브로드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원인으로서는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지지 세력 확보와 경제적 고용 효과 등을 제시할 수 있다.³⁰⁾

미국 경기부양책의 ICT 인프라 투자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입장에서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결 구도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해 시민 참여 증진, 온라인 투표자 등록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 등 연방정부와 시민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³¹⁾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전 계획 및 수행 과

29) OECD(2009e), p.23

30) Recovery Act의 IT 관련 사업은 약 420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5%를 차지하는데, 스마트 전력 그리드 110억 달러, 의료 ICT 현대화 220억 달러, 브로드밴드 보급 72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은민(2009), pp.77~78

31) 투표자 등록은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 기간에 민주당 득표율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가 되었다. 미국의 투표자 등록 제도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지지 세력으로 알려진 이민자나 저임금 근로자의 실제적 투표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NIA(2008), p.5.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것이 저임금 고강도의

정 등에서 흔히 지적된 부시 행정부의 정보 공개 문제를 대선 캠프 시기부터 중요하게 비판해 왔으며, 본격적 정부 출범 이전 선거운동 홈페이지와 인수위 홈페이지 및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등을 통해 지지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6,500명의 자원봉사자, 13,000명 이상의 오프라인 이벤트, 150만불에 이르는 온라인 선거자금 모금을 공표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인터넷 망 정책에 대척점을 이루는 연방정부 주도의 망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이며 광대역통신 사업자들이 부과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여부에 따라 웹사이트들의 전송망 획득이 결정된다. 이에 반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신규 시장 진입자나 비영리단체들의 인터넷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체제와 망 중립성을 제시하고, 연방정부 수준의 사업 추진을 내걸고 있다.³²⁾ 즉, 민주주의 강화라는 목표 아래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존 인터넷 망 및 콘텐츠 구축 환경의 재편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터넷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의 현실을 활용하여 ICT 인프라 투자가 여타 인프라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았다. 오바마 인수위 자문위원이 활동하는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의 한 보고서는 미국이 2007년 기준 OECD 가구당 브로드밴드 보급률 순위에서 12위(보급률 56%), 브로드밴드 평균 속도에서 15위를 기록한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ICT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뒤쳐졌고, 국내에서도 도시-농촌, 계층간 디지털 격차가 증가하고 빈부격차 역시 이를 따라 증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 외 지역 인구수 비율이 높은 미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하여 ITIF는 역시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이 낮은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2007년 기준 단지 1.6% 가구에만 브로드밴드가 연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ITIF는 스웨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인으로

노동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개인 업무를 보기 어려운 편모가정(working single mothers)의 실질 투표율을 감소였다.

32) 노은주(2009), p.60

로 들면서 미국은 주정부나 민간 차원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의 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의로 개혁 실패를 예로 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추진이 예산 규모, 국가적 차원 정보 통합, 비경제적 사업에 대한 추진력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즉,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100억 달러 투자 시 498,000명 고용효과 외에도 신속히 ICT 인프라 사업을 전환점까지 끌어올려 이후 민간분야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는 것이다.³³⁾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IBM과 공동 작성된 점, 세 영역이 IBM의 주력 사업 영역인 점, 경제적 효과 계산 방법의 문제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었다.³⁴⁾ 즉, 오바마 행정부의 ICT 인프라 투자 결정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한 정치·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경기부양책에 ICT 인프라 투자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복합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2) ICT 활용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ICT의 간접적 활용 사례는 지능형 운송 체계, 스마트 빌딩, 스마트 전력 그리드, 전자정부, 환경 교육 보건의 현대화 등이다. 이들은 녹색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R&D, 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시기를 맞아 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제시하였다.³⁵⁾

한국의 신성장동력 비전의 내용을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기술 개발 및 사업 영역 선정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린 시티(“첨단 그린 도시”)의 경우, ICT 기술과 생태기술을 융합하여 도시의 운영 기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에 공간정보산업 및 지능형 교통 체계의 통합을 시도한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산업”에서는 융합형 망 사업을 통해 콘텐츠와 서비스 및 네트워크

33) ITIF(2009)

34) 김사혁(2009), pp.45~46

35) 이형근(2009), p.9

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통신 핵심기술에 콘텐츠 사업 및 단말기 기술 개발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그린수송시스템”에서는 ICT를 기반 기술로 하는 RFID/USN, 그린IT기술 개발이 대상이 된다.³⁶⁾

〈표 9〉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CT 활용 관련 정책

녹색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기술 및 신기술 장려</p> <p>한국: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녹색운송, 수자원 개선 녹색기술, 로봇기술 등 융합 기술 외에도 보건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연구. 또한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에너지절약형 클린기술 등 개발하여 저탄소 경제 구축 목표</p> <p>캐나다: 10억 캐나다달러를 들여 향후 5년간 녹색 에너지 사업에 투자</p> <p>미국: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차량 배터리 개발 등 녹색기술 연구 및 공공기관 리노베이션, 에너지 전송 체계 개선 투자. 또한 300억을 들여 스마트 전력 그리드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투자</p> <p>네덜란드: 14.5억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효율적 주택과 풍차 등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혜택 및 규제책</p> <p>멕시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적 가전제품 구입 시 지원</p> <p>이탈리아: 기존 전기엔진을 대체하는 저탄소 기술 전파를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p> <p>룩셈부르크: 에너지효율적 가전 구입 및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p> <p>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공공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 강화하고 필수 목표 설정</p>
R&D	<p style="text-align: center;">기금 증액, 특정 영역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p> <p>EU: 2009년 32억 유로 규모의 민관협력 녹색기술 연구 시작하였으며 녹색 차량, 에너지 효율적 빌딩 등 연구</p> <p>독일: 5억 유로 규모의 하이브리드 및 클린 기술 기반 자동차 개발 사업</p>
	민간 R&D 투자 촉진
	스웨덴: 환경 친화 생산체계에 대한 대출 보장
	중소기업 지원 대책
	한국: 신성장동력 관련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훈련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시설 및 콘텐츠 투자</p> <p>이탈리아: 학교 시설의 디지털화</p> <p>미국: 지방 학교 시설 현대화</p> <p>한국: 디지털 교과서, e-러닝</p>

자료: OECD(2009a), pp.25~33.

36)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pp.21~24

1) 특징

〈표 9〉에 제시된 내용들은 간접적이긴 하나 ICT 영역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금액 상 더욱 많은 투자액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브로드밴드에 약 7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나, 의료 ICT에는 19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철도회사의 ICT 체계 현대화에 1억 유로가 소요되고, 일본의 ICT 활용 기술 개발에는 공공 및 민간 영역 투자에 3조엔이 배정되었다. 일부 녹색기술 개발 사업의 경제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0〉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녹색 투자 정책 내용 및 규모

국가	내 용	투자 규모	
		유로 (2009년 5월 22일 현재)	2008년 GDP 비율(%)
캐나다	녹색 기술 투자	15조	0.18
	그린 인프라 기금 폐수, 그린 에너지 발전 및 전송, 고체 쓰레기 인프라 등	6조	0.06
중국	친환경 분야 투자	223조	0.76
덴마크	그린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안(2009~2020년)	2009~2020년간 추가적으로 125조 (2009년에 7천만)	0.2 (2009년)
프랑스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2009~2010년)	50억	0.26
	항구 및 강 운하 투자	1억 5천만	0.01
	공공 건물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투자	2억	0.01
독일	그린 기술 투자	57억	0.20
	공공 건물 투자	200억	0.80
일본	저탄소 혁명 투자	123억	0.37
한국	녹색 교통 시스템 고속전철, 버스의 빠른 환승 시스템, 자전거 도로	64억	1.01
	대체 수자원 확보 빗물 유실 감소, 해수담수화, 진보된 폐수처리시설 등	12억	0.19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에너지화 시설,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 친환경 에너지 타운	17억	0.27
영국	에너지 효율, 철도 교통 관련 인프라	3억 3,500만	0.03
미국	그린 기술 투자	428억	0.41
	에너지 계획: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미터링, 배터리 기술	217억	0.22

자료: OECD(2009f).

둘째, 향후 다른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ICT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그린 ICT의 예를 들어 보면, 그린 ICT를 비롯한 녹색 기술은 ICT를 이용한 에너지 환경 분야 개선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즉, 초기 그린 ICT는 ICT 제품 생산 시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량을 줄이고 폐전자 제품을 재활용하여 ICT 제품의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를 노렸으나, 이후에는 운송·물류·건물 관리·환경 보존 등에 ICT를 활용하는 쪽으로 관점이 변화하여 융·복합 기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살펴보면, 2006년 스톡홀름의 지능형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통하여 25% 시내 교통량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감축 효과를 얻었다.³⁷⁾ 또한 미국 워싱턴의 소비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 건조기 시범사업의 경우, 소비자 전기 요금을 평균 10% 절감하고, 전력 최고 수치가 15% 감소하는 등 여러 시범 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³⁸⁾

이와 같이 ICT 기술이 여러 영역에 사용되는 융합화 경향이 한국에 갖는 장점으로 ICT산업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활용 산업의 경우 RFID/USN은 20% 이상, 시스템반도체는 7%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IT신산업을 창출하고 타 영역의 고부가가치화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표 11〉 ICT산업 평균 성장률

기간	1996~1999	2000~2003	2004~2007
성장률(%)	21.7	19.0	13.5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2009), p.31

또한 PC 등 기존의 ICT산업은 중국, 대만 등에 의해 기술격차가 축소되어 국제적 경쟁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시장 및 기술 선점 효과를 들 수 있다.

37) 김진환(2009), pp.24~25

38) Slevin and Mufson(2009)

3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2009), p.31

2) 사례: 일본 경기부양책 논의의 변화 과정

이와 같이 ICT를 기반으로 한 활용 사업이 예상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ICT 활용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경기부양책 논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 상기한 바와 같이 네 차례 발표된 일본 경기부양책에는 단기적 경기부양 대책 외에도 장기적 성장력을 갖추기 위한 “성장력 강화 및 저탄소 사회 실현” 관련 감세 및 재정지원 조치가 포함되었는데, 초기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가 4차 대책에 들어서면 해당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소 정부 경기부양책이 선언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장기적 성장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표 12> 일본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정책

안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설비 도입 가속: 가정 기업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고효율 설비, 에너지 절약 가전 도입 - 교통분야 에너지 절약화: 친환경 자동차 등 에너지 절약형 교통 수단 보급 - 목재·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 환경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 고효율 차세대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 국제경쟁력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 혁신 기술 전략, 첨단 의료 개발 특구
생활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고 활력있는 고향 만들기: 환경보전형 지역 조성 - 지역 생활 폐수 대책: 에너지절약 정화조, 대규모 정화조 정비
생활방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설비 등 투자촉진 세제 혜택 - 친환경 자동차 감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자료: 내각부.

긴급대책까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감세 정책, 보조금 지급, R&D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경제위기대책’에 들어서야 의료 ICT 및 “ICT에 의한 저력발휘”와 같이 ICT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대책’ 발표 하루 전인 4월 9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개척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개척전략’은 2020년까지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성장전략을 담고 있으며 “저탄소 혁명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태양광 시스템이나 친

환경 자동차의 보급”, “안심·건강한 건강 장수 사회(요양보호, 고용 창출)”, “일본의 매력 발휘(관광대국이나 콘텐츠산업 육성)”의 3가지 성장모델로 구성되어, 경제위기 대책의 ‘성장전략’과 유사한 제목과 내용을 갖고 있다.⁴⁰⁾

〈표 13〉 4차 경제위기대책 중 ICT 관련 정책

성장전략	저탄소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 학교 뉴딜 정책(학교 내진화, 태양광 패널, ICT 환경 정비), 중소기업 태양광 설치 - 저연비 차량 및 에너지 절약 제품: 신차 구입 수당 지급, 에너지 절약 주택 지원, 에너지 혁신 기술 등 R&D - 교통 인프라 혁신: 저탄소 교통 물류, 차세대 저공해 자동차 기술 개발 실용화 - 자원 강국 실현: 도시 광산(3년간 휴대전화 1억대 철수 목표), 원자력 기술 개발 강화, 자원재 활용
	건강장수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료 신기술: 의료 ICT(의료 시설 ICT 기초 정비,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첨단 의료 기술 R&D - 간호 인력 처우 개선 - 육아 교육 지원
	저력 발휘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업 지원 - 첨단기술 개발 인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연구인력 확보, R&D 지원),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 통한 신시장 창조(3년내 세계 최고 수준 벤처 기업 100개 창출) - 지역통합과 경쟁력 강화 - IT에 의한 저력발휘 - 소프트 파워 관광

자료: 내각부.

〈표 13〉에 보이듯이 경제위기대책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안심대책 이후 거론되지 않았던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이 다시 등장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내용이 경제위기대책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새로 등장한 의료ICT 역시 기존 경기부양책에서 제시하는 사회의 고령화 등으

40) 한국은행(2009)

로 인한 의료 지원 강화에 더불어 의료 기관 및 지역 의료시스템의 설비 및 시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자처방전, 원격의료와 같은 구체적 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 “ICT에 의한 저력발휘”의 경우에도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 고령자 보호 지원, 의료정보 공유 등을 실현하는 유비쿼터스 타운 추진, 사물 간 무선 브로드밴드 실현을 통한 충돌하지 않는 차량 시스템 구상 등 그간 제시되어온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후반기 국내 경제의 심각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대책에 집중하였던 일본 정부는 이후 경제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력 저탄소 정책 사업 규모를 안심대책 수준으로 회복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제 성장 상황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전략을 강화하되 단기적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일본의 미래지향적 경기부양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안건의 구체화 과정은 일본 ICT 정책 주무부처인 총무성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서의 ICT 정책 발전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일본 국내 경제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2009년 2월 총무성의 “ICT 비전 간담회”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제언으로 “ICT 뉴딜 정책”을 제시한다.⁴¹⁾ “ICT 뉴딜 정책”은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15년경 까지 현재 100조엔 정도의 시장 규모를 2015년경 두 배로 늘일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간 8개 항목(브로드밴드, 전자정부, ICT 활용 의료 교육, 디지털 콘텐츠, 유비쿼터스 활용 지방 네트워크 연결)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간담회는 “제언”의 도입부에서 “모든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ICT를 상정하였다. 즉, 기존의 e-Japan 전략을 통해 2005년까지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정비되고 ICT 활용이 추진되어 이미 ICT가 사회기반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향후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⁴²⁾

41) 간담회는 총무성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산하로 ’08년 10월 설립되었으며 ’09년 6월 최종보고서 발간과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제언의 구체적 후속책은 “鳩山(하토야마) ICT플랜: 디지털 일본 창조 프로젝트”(3월 17일 발표)와 “스마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실현 전략(안)”(6월 5일 발표)이다. 하토야마 플랜 역시 신성장동력으로서 ICT 산업을 보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ICT 분야 기술 선별 및 조기 시장 투입을 위하여 9개 시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언”의 전자정부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접목한 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디지털 문서 작업과 접목한 내셔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체화하고, 인적 자원 육성과 보안 강화를 추가하였다.⁴³⁾ 이를 통해 ICT 시장을 향후 3년간 100조엔 규모로 확대하고 약 30~40만명 고용 창출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언의 구체화 작업을 더욱 진척시킨 것은 올해 6월 발표된 ‘스마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실현 전략(안)’으로 제언과 하토야마 플랜의 내용을 4개 중점정책 분야의 12개 세부 목표로 더욱 구체화시키고 법제도적 촉진책 및 ICT 제도 관행 개선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ICT가 기반 기술이 되어 지식정보를 유통·공유하는 ‘지식정보경제국가 실현’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경제위기 대응책으로서의 총무성 ICT 전략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일본이 선점해 나갈 수 있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한 영역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포괄적인 주제에서 세부적 사안으로 좁혀나갔다는 점이다. 둘째, 각 하부 사업의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정책이나 제도 개선책 등을 보완해나갔다. 셋째, ICT를 기반 기술로 보고 융합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나갔다. 넷째, 각국 경기부양책으로 제시되는 ICT 인프라 투자의 경우,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 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무선 브로드밴드, 디지털 실크로드 등 각 주제의 성격에 맞는 중장기적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여러 개 구상하여 여러 영역과 또한 각 인프라끼리

42) 8개 항목 중 ICT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제언 1”의 브로드밴드 활용도 제고,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 촉진, 지상파 TV의 원활한 디지털화 전환, “제언 7”의 지방의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의 브로드밴드 망 접속 가속화이며, 이외는 ICT를 활용한 서비스(전자정부(제언2), 의료 ICT 활용으로 인한 전자처방 원격의료(제언3)), IC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제언4 그린ICT), 디지털 신산업(제언5, 제언6 디지털 콘텐츠), 인적 교류 및 공동 사업의 국제 협력(제언8)처럼 ICT를 타 영역에 활용 및 확산하는 것이다. 김태은(2009)

43) NIA(2009a)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현재의 구상은 어디까지나 구상일 따름이며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여러 신기술 개발 사항을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전체의 틀 안에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표 14〉 일본 총무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ICT 전략 비교

ICT 뉴딜 정책 (2009년 2월 23일)	스마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실현 전략 (6월 5일)
1. broadband 및 망 투자	- 광대역 제로 지역 해소 - 무선광대역 도입 및 보급 - NGN 실현(2010년 후반)
2. 전자정부	- 행정기관 시스템의 클라우드 연계를 통한 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지자체 클라우드 구축 - 개인의 행정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전자私서함(2015년 목표)
3. 의료 교육	- 관련부처 연계로 의료 교육분야 ICT 활용 추진
4. 그린 ICT 및 저탄소 혁명	-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환경계측 및 예측 기술 향상 - 스마트 그리드 등 활용한 친환경 사회 인프라 실현(2010년 목표)
5. 디지털 신산업	- 충돌하지 않는 차를 실현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2012년 목표) - 가정내 무선 초광대역(2015년 목표)
6. 디지털 콘텐츠	- 콘텐츠 산업 미래상 검토회의(가칭) 설치 - 콘텐츠의 네트워크상 부정 유출 감시 경고하는 체계 지원
7. 지역 활성화	- 유비쿼터스 타운 구상(2009년)
8. 국제 협력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고속통신망을 통한 국제연구나 인재연수 실시하는 '디지털 실크로드구상' - ICT 분야 정부간 협력 촉진
(하토야마 플랜 추가 사항)	- 보안 위한 필터링 서비스 보급 - 개인정보 기본 규칙 정비 및 신규 보안정책 제정(2009년) - 융합형 ICT 전문 인재 육성거점 형성
(전략 추가 사항)	- 제도개선: IT 전략본부의 ICT 제도 관행 규제 점검(2009년) -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 구축(2010년 임시국회 제출)

자료: NIA(2009b).

3.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ICT 영역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를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켰으며, 인프라 투자와 활용 사업 양자에 있어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공급 역시 해소하려는 추세이다. 일련의 한국 경기부양책들은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ICT 인프라 투자는 적고 ICT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한국의 경기부양책과 세계적 추세

한국은 426억불(2008년 GDP 대비 4.9%)로 OECD 조사 대상국 중 7위를 기록하여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약한 자동안정화장치나 낮은 국가채무를 보유하여 큰 규모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 수요 진작 외에 장기적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하는 뉴딜 정책의 성격에 맞추어 공공투자 비율 역시 조사 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건설·운송 등 기존 사업을 친환경·ICT 기술 기반으로 통합하는 그린 뉴딜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경기부양책과 ICT 인프라 투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ICT 인프라 투자를 위하여 기존 망 확장 혹은 차세대 망 투자를 발표하는 데 비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녹색뉴딜사업의 인프라 투자는 기존 인프라에 ICT를 접목하는 수준이어서 ICT 인프라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다양한 형태의 ICT 인프라 투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역시 ICT 인프라 투자를 향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앞서 오바마 행정부의 브로드밴드 투자 논의의 배경에서 본 것처럼 ICT 인프라 논의는 포함여부보다 그 형태와 방법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지원 사업이나 UBcN(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초광대역 융합망) 사업을 경제 위기 대응책의 요소로 포함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

다.⁴⁴⁾ 그러나 ICT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한국의 상황에서는 차세대 망 사업의 한계 효과가 투자 비용보다 높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경제적 분석이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CT 인프라 투자를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포함한다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어떠한 활용기술을 위해 쓰일 것인지 판단하여 인프라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ICT 인프라 사업은 에너지 기술 관련 스마트 그리드, 전자정부 관련 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국제협력 관련 디지털 실 크로드가 통합적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논의에서 흔히 지적되듯이 경기부양책으로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서 ICT 관점이 초기부터 배제되는 것은 성장력 확보 및 사업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⁴⁵⁾ 단순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최근 4대강 사업에 센서 네트워크 등의 아이디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다.⁴⁶⁾ 따라서 향후 한국 경기부양책에 ICT 인프라 자체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타 인프라 사업에 ICT를 포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경기부양책과 ICT 활용

한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및 기술을 갖춘 일본 역시 경기부양책에 있어 인프라 투자보다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방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기 노출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이 결국 경제 위기의 장기적 지속성을 인정한 뒤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를 기반 기술로 삼은 여러 형태의 융합형 사업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비하여, 초기부터 융합형 사업에 초점을 맞춘 한국은 정책적 번복에서 오는 혼선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44) UBcN은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의 ALL-IP 기반 망으로, 초고화질 실감형 양방향 TV인 SoTV(Service over TV) 서비스,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화 인터넷 및 방송 등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다중융합서비스(MPS: Multiple Play Service) 등 신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5) 빈재익 외(2009), pp.33~34

46) 장지영(2009. 6. 9)

와 같은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 초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나간 점이 주목된다.

일본이 제시하는 사업은 사실 한국의 신성장동력 비전이나 녹색뉴딜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 그렇지만 신성장동력 비전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각 주무부처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에서 항만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RFID의 경우, (구) 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였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자신의 업무 영역에 맞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효율적 시너지 효과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경기부양책이 신기술 개발 위주의 큰 틀을 짜는 것은 향후 경쟁력을 키우고 신기술 확보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외에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현실적인 이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Ⅲ. 결 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발표된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OECD는 2009년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4.3%, 비회원국은 -3.9%를 기록할 것이며 유럽 지역 실업률은 올해 말 10.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⁷⁾ 아직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추가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기부양책과 이에 포함된 ICT 관련 정책의 기존 내용 및 추가적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찾고자 본고에서는 우선 OECD 보고서를 토대로 세계적 추세를 짚어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요국가에서 재량적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재정지출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공공투자 사업을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ICT 정책의 경우, ICT 인프라 투자 대책과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을 골자로 한 ICT 활용 대책이 크게 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단기적 수요 진작과 중장기적 성장력

47) OECD(2009b), p.57, p.61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특징은 한국의 ICT 관련 경기부양책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ICT 인프라 자체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고, ICT 활용의 경우 녹색뉴딜사업은 신기술 위주라기보다 기존 인프라 사업 영역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하였고 신성장동력 비전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향후 ICT 경기부양책은 ICT 인프라 투자는 아니더라도 기존 인프라 투자에 ICT 기술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ICT 활용은 체계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구체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에서 ICT를 주요 국가 경쟁력 중의 하나로 삼고 혁신 및 R&D 투자를 아끼지 않아 이후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현재 여러 나라와 ICT 협력 및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은 지역 단위가 아닌 글로벌 단위의 위기로서 거의 모든 국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서 ICT 영역이 직간접적으로 투자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과 ICT 영역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겠다.

참고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 1. 1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2009), 『신성장동력 참고자료』, 2009. 1.
- 기획재정부 외(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6.
- 김사혁(2009),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IT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21권 1호 통권 454호, pp.43~47.
- 김진환(2009), “그린 IT의 추진 동향과 패러다임의 변화”, 『IITA 주간기술동향』 1397호, pp.21~30.
- 김태은(2009),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한 일본의 ICT전략”, 『정보통신정책』 제21권 5호 통권 458호, pp.59~63.

내각부 경제전망·경제대책 사이트

<http://www5.cao.go.jp/keizai1/mitoshi-taisaku.html>

노은주(2009),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술과 미래』 제20호, pp.58~61.

문향란(2009.2.26), “30조+ α ‘슈퍼 추경?’”, 《한국일보》.

박정현(2009), “OECD 그린 ICT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21권 10호 통권 463호, pp.81~90.

빈재익·이홍일·박성민(2009),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와 시사점”, 『건설이슈포커스』 2009-09.

이형근(2009),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9-18.

이은민(2009), “미국 경기부양법 ARRA of 2009의 주요내용과 동 법안에 포함된 IT관련 투자”, 『정보통신정책』 제21권 5호 통권 458호, pp.74~79.

장지영(2009. 6. 9), “4대강 살리기에 첨단 IT 대거 활용”, 《전자신문》.

정무섭·곽수중·엄정명·박현수(2009),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Report』 2009. 4. 3.

한국은행(2008a), “일본의 “안심(安心)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평가”, 2008. 9. 10.

_____ (2008b),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 추이와 전망”, 2008. 11. 4.

_____ (2009),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09. 4. 14.

FCC(2009), “Bringing Broadband to Rural America: Report on a Rural Broadband Strategy.”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91012A1.pdf

IMF(2009a),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2009. 2.

_____(2009b), “Group of Twenty: Note by the Staff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TIF(2009), “The Digital Road to Recovery: A Stimulus Plan to Create Jobs, Boost Productivity and Revitalize America”, 2009. 1.
- KOTRA(2009),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Global Issue Report』 09-003, 2009. 2. 23.
- NIA(2008), “오바마 정부의 IT 정책 방향과 시사점” 『IT이슈&트렌드』 08-09.
- _____(2009a), 『IT Issues Weekly』 2009. 3. 25.
- _____(2009b), 『IT Issues Weekly』 2009. 6. 10.
- OECD(2009a), Economic Outlook-Interim Report.
- _____(2009b),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vesting in Innovation for Long-Term Growth.
- _____(2009c), Road to Recovery.
- _____(2009d), The Role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Economic Recovery.
- _____(2009e), Strategies for Aligning Stimulus Measures with Long-term Growth.
- _____(2009f), Green Growth: Overcoming the Crisis and beyond.
- O’Harrow, Robert(2009. 6. 17), “The Calculus(and Politics) of Stimulus II”, The Washington Post.
- Saez, Catherine(2009.6.16), “OECD Report: “Creative Destruction,” Innovation Focus Needed In Economic Crisis”
<http://www.ip-watch.org/weblog/2009/06/16/oecd-report-%E2%80%99Creative-destruction%E2%80%9D-innovation-focus-needed-in-economic-crisis/>
- Slevin, Peter and Steven Mufson(2009. 3. 10), “Stimulus Dollars Energize Efforts to Smarten up the Electric Power Grid”, The Washington Post.